



東京学芸大学リポジトリ

Tokyo Gakugei University Repository

A Study about the Abolition of the Designat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about the Situation of Education on Migrants and Their Children in Korea

メタデータ	言語: ko 出版者: 東京学芸大学学術情報委員会 公開日: 2013-02-12 キーワード (Ja): 多文化共生社会, 多文化家庭の子ども, 多文化教育, 差別, 逆差別 (特惠), アイデンティティの葛藤 キーワード (En): 作成者: 李, 修京 メールアドレス: 所属: 東京学芸大学
URL	http://hdl.handle.net/2309/132444

한국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라는 호칭 폐지의 고찰과 외국 이주민 및 이주 어린이의 교육 실태

李 修 京*

外国語・外国文化研究講座

(2012年 8月 31日 受理)

Abstract

이 논문은 외국 출신으로 한국에 이주한 이주민이 140만명을 넘어선 현재,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주를 통하여 가정을 만들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아이들은 《다문화 가정 어린이》라는 호칭으로 구별하여 한국 사회에서 격리되고 있다는 소외감을 느끼는 등의 불편한 감정으로 인해 학교 교육이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외국에서 이주한 이주민들 실태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2007년 5월에 4258명이었던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들이 2011년 1월에는 15만 1154명으로 증가했으나 언어 습득의 문제나 가정경제 등의 제반 문제로 수험 위주의 교육 중심인 한국의 교육제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고등학교 진학의 약 70%가 학교를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왕따문제나 차별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더구나 교사들의 인권의식도 낮고, 학교에 있어서의 인권 교육이나 다양한 다문화 교육도 우선 과제가 되고 하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사회 배경과 역사, 현재의 병역제에서 민족주의 개념에 의한 교육의 발자취 등에도 주목 함과 동시에 최근의 한국 사회의 다문화 교육이나 정책, 재한 외국이주자의 실태 등에 대해서도 고찰하면서 교육 기관이나 각 미디어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라는 호칭에 의해 구별되어 소외감을 느끼거나 차별을 느끼는 아동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호칭의 양산을 불식해야 하는 것이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한국 사회의 우선과제임을 지적하려고 한다.

참고로 이 논문은 필자가 2012년 6월 26일의 제 13회 세계 한민족 포럼 마닐라 대회에서 발표한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라는 호칭 폐지에 관한 논문에 가필, 수정을 행하여, 최근의 움직임이나 한일 사회에서 발표되고 있는 연구 등의 분석을 비교하여 다문화 사회에 있어서의 외국 출신의 이주자나 그 어린이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모색한 것이다.

Key words: 다문화 공생주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 다문화 교육, 차별, 역차별(특혜), 정체성의 갈등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Asian Cultures

要旨: 本稿は、外国出身の韓国への移住者が140万人を超える昨今の韓国で、多くの外国出身者が就職や結婚移住を通して家庭を築き、韓国社会の構成員として働いているにも拘わらず、その子どもらが《多文化家庭の子ども》という呼称で差別されることで、韓国社会から隔離させられ、差別されているという疎外感を感じ、肩身の狭い思いによって学校教育や社会に馴染めないという状況が急拡大していることに注目し、韓国における外国から

* 도쿄가쿠게이대학교 인문사회과학계 외국어 외국문화 강좌 소속

の移住民たちの実態について考察する。

韓国政府によれば, 2007年5月に4258人であった外国移住民の子どもたちが2011年1月には15万1154人へと増加したが, 言語習得の問題や家庭経済的諸問題によって, 受験のための教育が中心の韓国の教育プロセスについて行けず, 高校に進学する年齢の約70%が学校を放棄している状態である。さらには学校におけるいじめ問題や差別を受ける場合も多々ある。さらに, 教師の人権意識も低く, 学校における人権教育や多様な多文化教育の導入・確立も優先課題になっている。

本稿では, 韓国独自の社会背景や歴史, 現在の兵役から民族主義概念による教育の歩みなどにも触れるとともに, 最近の韓国社会における多文化教育やその政策, 在韓外国移住者の実態などについて考察するとともに, 教育機関や各メディアで頻繁に使用される《多文化家庭の子ども》という呼称によって区別され, 疎外感を覚えたり, 差別を感じることもあるため, この呼称の量産を押しよくすることが多文化社会を目指す韓国社会の優先課題であることを指摘する。

なお, 本稿は, 筆者が2012年6月26日, 第13回世界韓民族フォーラムマニラ大会で発表した《多文化家庭の子ども》という呼称の廃止に関する論文に大幅に加筆, 修正を行い, 最近の動きや日韓で発表されている研究などの分析を照らし合わせ, 多文化社会における外国出身の移住者やその子どもらと共に生きることについて模索したものである。

キーワード: 多文化共生社会, 多文化家庭の子ども, 多文化教育, 差別, 逆差別 (特惠), アイデンティティの葛藤

들어가면서

2012년에 한국 인구가 5000 만명을 돌파한 배경에는 다문화권 출신 (국제 결혼 증가 및 탈북자 새터민 가족 포함) 인구의 증가도 간과 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2012년 8월 9일에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 주민 자녀 등) 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11.4%가 증가한 140만 9577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 (조선족 포함)이 55.4%이고 그 다음이 베트남과 미국, 동남아시아 출신이며 유형별로는 한국 국적 취득자가 29만 2096명 (20.7%)이고 외국 국적이 111만 7481명 (79.3%) 라고 한다.¹ 게다가 외국 국적자의 41.8%가 외국인 근로자이고, 결혼 이민자는 10.2%, 유학생은 6.2%, 외국 국적의 동포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 등)가 9.6%였고, 한국 국적자 중에서 5.4%가 결혼 후의 한국 귀화자이고, 외국인 주민의 자녀가 12%의 16만 8583명이었다.²

그 외에 불법 체류 등으로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이주민이 2011년에는 17만명으로 알려졌고, 그 가정의 아이들이 비록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초, 중, 고등 교육을 받고 자란다 하더라도 [속민주의] 를 택하는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국적의 불법체류자가 되는데, 2010년 현재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미등록 이주 아동은 2만 8511명에 이른다³ 고 한다.

또,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85%이지만 중학교 진학은 60%, 고등학교 진학률은 30%대로 급락하는데⁴, 상급학교 진학률이 그렇게 낮은 이유는 경제적, 언어적, 문화적 이질감의 문제 등과 더불어 학교에서의 소외감 (따돌림을 포함)과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학교 생활 이탈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⁵

이 연구에서는 학교 생활에서 이탈하거나 교육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 자녀들의 실태를 고찰하며, 지금도 [다문화 가정 어린이] 란 명칭으로 격리되고 있거나, 반대로 기업이나 기관들의 이미지 전략을 위한 [다문화 가정 어린이] 에 대한 배려를 표방한 다양한 사회적 특혜가 역차별을 자아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러한 호칭이 각종 언론이나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면서 아이들이 받는 소외감이나 이질감이 차별을 자아내는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단일민족이란 의식이 강한 한국 사회가 타문화권 출신의 이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차별이 없도록 배려하여 공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하는게 한국사회의 과제라고 한다면 [다문화 가정 어린이] 등의 호칭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한다. 왜냐면 일단 한국 사회에 규정된 학교 교육을 받는 자녀들이라면 그것이 한국인 가정이든 외국인 가정이든 모두 차별없는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李: 한국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라는 호칭 폐지의 고찰과 외국 이주민 및 이주 어린이의 교육 실태

그들은 내일의 한국 사회를 짊어져야 할 책임을 져야 할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므로 차별없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적 이념하에서 건전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에 다문화 교육 및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형태로 교육 환경 및 생활 환경 속에서 이뤄지도록 추진해야 하고, 타문화권 이주민과 자연스러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정부 및 언론,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오랫동안 외국의 침략과 지배를 당해왔고,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고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사용되어 온 단일 민족주의 개념이 다른 나라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아직도 남북 대치상태 속에서 성인 남성의 병역 의무가 필수인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외국인 주민 자녀들의 정체성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공생 프로그램과 포용 정책을 교육계는 물론 범 사회적으로 행해야만 사회적 소외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런 의도를 염두에 두면서 언론 및 교육 기관이 만든 [다문화 가정 어린이] 라는 호칭으로 인해 차별성 혹은 소외감을 받고 위축된 외국인 주민 및 그 자녀들이 더욱 사회에서 격리된 감정을 줄 수도 있는 구별 용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호칭 폐지 여부를 제시하려고 한다. 본래의 의도가 어떻든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호칭 자체가 차별성이나 괴리감을 자아내게 만들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인권 의식이 교단의 교사들에게도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향후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및 인권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우선 과제라는 점도 지적해 두려고 한다.

1. 사회 성장의 동력이 되어 온 [단일 민족주의] 개념 속의 다문화 공생 지향의 한국

오늘의 한국 사회가 있기 까지는 외세 침략과 그 지배하에서 버텨 온 독자적인 한국의 역사가 존재한다.

한국의 근대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패권 싸움 결과 일본의 강제 병합을 통한 식민지 통치 지배를 받아야 했고, 강대국의 대리전쟁이라는 한국 전쟁을 통해 동족간의 미증유의 희생을 치렀고, 폐허 속에서 일어나기 위한 동력으로 강한 단일 민족주의의 결속이 주장되어 [한강의 기적] 이라는 경제 발전을 하게 되었다.

지금도 IT선진국, 문화 기반 정책 실행으로 인한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성공 등으로 한류문화의 종주국이란 이미지와 더불어 세계 각지에서는 외국인 이주민이 증가할 만큼 풍요로운 사회의 하나로 국제 사회에 자리를 잡는 한국이지만, 1953년의 한국 전쟁 이후엔 가난 극복을 위한 각종 외화 획득이 될 만한 모든 경제 정책에 주력하였고, 60년대엔 서독에 광부 및 간호사⁶를 파견, 70년대 이후엔 중동 지역에 건설 노동자 파견, 미국과의 동맹이란 미명하에 솔한 군인들이 베트남 전쟁에 파견되었고, 강력한 민족주의 개념하에서 우수한 국민성이라는 슬로건과 더불어 기업 전사가 양산되면서 [한강의 기적] 을 이루게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사교육의 비대화 (거대한 학원 산업등), 치맛바람, 핵가족 등의 용어가 생겨나며 학생들은 수험 전쟁 속으로, 부모들은 경제 생활을 통한 교육 투자에 힘을 쏟게 된다. 최근엔 [세계화=영어권, 혹은 중국어권 유학] 이란 현실 속에서 [기러기 아빠] [펭귄 아빠] 등이란 한국만의 이색적인 용어 하에 자식들의 교육 때문에 가족이 흩어져 사는 독특한 이산 가족 구조가 생겨나기도 한다.⁷

한편, 근대 이후 특히 강해진 학연, 지연, 혈연,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 종교 갈등으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국제 사회 속의 한국을 시험할 기회로서 1980년대의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친 뒤, 민주 의식이 고무되면서 1987년의 민주화 항쟁으로 인한 언론의 자유와 문화 산업의 활성화, 2002년의 한일 월드컵 개최 이후의 각종 국제 대회 유치로 인해 국가 및 지자체 살리기의 소재 개발이 강해졌고,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 정책과 다양한 형태의 세계화 정책을 펼치게 된다. 그런 경쟁주의 사회 환경 속에서 다양한 글로벌 인재가 양산된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한편으로는 경쟁주의 사회가 만들어 낸 고학력, 저출산, 1류 혹은 1등 지상주의, 명문/명품/물질 최고주의의 사회적 분위기를 부추키는 교육 투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의 폐단이 한국 사회의 문제가 되는 요인을 만들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⁸

또한,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해 온 유교적 폐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오랜 유교 사상 속에서 생겨난 신분계급의 차별주의는 물론, 남존여비 사상으로 인해 근래까지 차별 속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성들의 전문 기술 취득, 적극적인 사회 진출, 고학력, 보다 좋은 삶의 지향으로 Gender (사회적 성차별) 문제의 해결에 대한 모색도 현저한 사회 문제가 되어 왔다.

또, 좋은 취직으로 대우받고 풍요롭게 살기 위한 수단으로 수험 전쟁의 목표가 된 것이 대학이었던건만,

저출산과 기대치 이하의 취업률로 대학의 기능은 취업 알선을 의식한 취업 기관화 경향이 강해졌다. 부모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과 더불어 진학률이 높아지자 취업에 유리한 스펙 (기능 기술력, 자격증, 유학 등)에 주력하는 젊은이들도 증가하게 된다. 1980년대 말의 해외여행 자유화와 더불어 한국학생들이나 국민들의 해외 여행이 급증하고, 현실적으로 다가온 [세계 속의 한국] 을 실감하고 향유하기 위해 전문직 혹은 좋은 조건의 취업을 위한 고학력 고스펙지향의 사회 경향과 한류 문화 소프트의 화려한 내용들이 범람하고, 저출산률과 첨단 과학의 문화 생활 향유를 선호하면서 3D⁹업종이 경시된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결혼이 필수보다는 선택이라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만혼 혹은 미혼이 늘어나고, 생활 복지 환경 개선으로 인한 환경 복지화와 노인들의 고령화 추세로 인해 정부는 정작 국가 성장의 동력 부족에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런 동력을 보충해 주는 대안으로 외국인 이주민들 및 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지만,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 있는 분단 사회인 한국에는 성인 남성의 병역의 의무는 물론, 과거의 상흔이 남겨진 역사를 거치며 다양한 민족주의 의식이 교육 속에 내재하게 되는 것이다.

2. 한국 사회의 [다문화] 지향의 저해 요소인 [다문화 가정 어린이] 용어는 폐지를.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他문화권 출신 이주자가 증가하자 2000년도 중반부터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 어린이] 라는 호칭이 일반화 되고¹⁰, 한국 정부는 2006년에 [다문화주의] 를 이념으로 하는 통합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의도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문화 주의적 관점에서의 종합지원정책] 이란 시점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대책] (2006년 5월)을 책정하고, 교육지원을 위한 교사용 자료 발간과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과 보급, 한국어 교육반이나 방과후 학교 운영, 한국 문화 이해와 체험 활동의 운영, 다문화 가정의 부모를 위한 연수 및 자녀에 관한 자료 개발과 보급,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국제 이해 교육을 외국인 이주민 및 그 자녀는 물론, 한국의 일반 학생과 교사, 부모 대상으로 행해졌다.¹¹ 그 뒤, 2007년에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2008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배경으로¹² 2011년 8월에는 200군데의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기본 사업 및 방문 교육 사업, 이주민 자녀들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 통역 번역 사업 등을 중점으로 운영되고 있다.¹³

그러나 앞서서도 논했듯이 단일 민족주의 사회로 전후의 발전을 거듭해 온 한국 사회엔 다문화주의¹⁴ 공생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충분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나 사회적인 제도 정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사회적 편견과 각종 차별 혹은 역차별 등의 다양한 문제가 생겨났다. 즉, 지금 한국 사회는 [함께 협력하며 어우러져 살아가는 다문화 공생 사회] 라는 공동체 형성과 국내의 세계화 지향이라는 시대적, 사회적 과제 앞에서 최선책을 모색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상황 속에 외국인 이주민의 증가 속에서 범죄도 늘어나자 근래에는 제노포비아 (Xenophobia)란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색안경을 끼고 외국인 이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게 보거나 편견적인 배타성으로 오해를 하면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많은 이주민들도 상처를 받게 된다. 한국을 믿고 자신의 삶터로 어려운 선택을 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가지고 내일을 짊어질 아이들을 키우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영유하려고 할 때, 그들을 받아 들이는 정책을 현실 과제로 책정한 사회라면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내국인이 협력하여 함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전한 공동체를 지향하도록 [함께 살아야 하는 이웃] 이라는 공생의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물론 외국에서 성장한 이주민들이나 그 자녀들이 140만명을 넘어서니, 불법체류자나 범죄자도 생겨나고, 그런 이주민들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국내외의 악질 고용업체도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 속에 잠재된 자민족 우월주의 사상에서 기인하는 배타적 민족주의 의식으로 그들을 대하며 외국 출신이란 이유로 소외시키거나 노예와 같은 학대나 모멸감을 주거나 상대의 존재성이 부정 당하거나 문화를 무시당한다면 그들 역시 충동적인 감정으로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낯선 이국땅에서의 설움이 다른 형태의 범죄로 나타나는 경우가 생긴다.

경찰청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의 2002년도 외국인 범죄현황을 보면 범죄자의 합계가 5,221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22,543명으로 4 배 증가를 한다. 한편, 2010년 현재 한국의 전체 인구는 4,887만이고, 2008년에 발생한 범죄 건수는 218만9,452건에 검거 건수는 191만4,469건, 검거 인원수는 232만2,882명으로, 범인 검거율은 87.4%에 이른다.¹⁵

李: 한국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라는 호칭 폐지의 고찰과 외국 이주민 및 이주 어린이의 교육 실태

이런 현실 속에서 내국인 사이에서 생겨나는 범죄 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이주민이기에 뉴스의 화제로 삼고 언론 플레이를 반복하여 외국인 이주민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미디어의 속성은 무시한 채 다른 문화권 출신의 범죄를 부각시켜 국민 감정을 불안으로 내몰고 이주민에 대한 혐오감을 자아내는 언론의 그릇된 자세부터 불식해야 할 것이다.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히 사회 혼란을 초래하므로 사회 전체적인 치안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주민들도 나의 삶을 위해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길 각오했다면 한국 문화 이해와 제도적 상황 파악,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 수단이 될 언어 습득에 노력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나 정부 및 교육계에서는 새 삶터에 대한 지식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재나 참가 프로그램 등을 조성하고, 외국인 이주민 뿐이 아니라 국내 학생 및 교사, 일반인들도 참가하여 함께 생각하고 상호 신뢰 구축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그들이 안심하고 사회 구성원이 되어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동하는 것이 건전한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첩경이 될 것이다.

급격한 인류 이동이 세계적 추세에다 국제 기관으로 부터 다문화 출신에 대한 배려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다문화 공생주의 사회를 세계화의 일환이자 한국 사회를 위한 대안으로 조성하려고 하지만, 궁극적인 대안도 대책도 없는 다문화 사회 정책은 되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렇기에 한국 사회의 경제 발전과 치안 유지, 인구증가를 위한 현실적 과제 해소를 위해 걸맞은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천하는 것은 물론, 평등 의식이 정착하도록 국민들의 인권 의식에 대한 교육 정책 및 언론 활동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 다문화권 출신자들이 안심하고 사회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회 계획이 필요하다.

다문화 공생 주의를 한국의 사회 체제로 받아들이고, 향후 혼란스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합법적으로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된 모든 사람들이 국가적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없도록 동등한 대우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의식과 의무도 평등히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불평등을 낳는 (차별, 역차별을 포함) [다문화 가정 어린이] 라는 호칭은 철폐해야 한다.

어떤 카테고리 를 만들어서 격리시키고 관리하려는 용어의 저변에 깔린 自민족 우월주의 (ethnocentrism)의식은 비록 그것이 애칭¹⁶ 이든 속칭이든 그 용어로 불리우는 입장에서는 현저한 차별의식을 가지고 살게 된다. 이러한 차별 의식을 해소하고, 평등하게 사회적 대우를 받게 되는 상호 이해가 없으면 세계화 다문화화는 불가능하다.

최근의 한국은 저출산 현상¹⁷ 과 고령화 등으로 정작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아이들과 젊은 층이 줄어들자 위기를 느끼게 되고, 다문화 지역 출신 이주민을 받아들이며 영주권을 가진 3년 이상 한국에 사는 이주민들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 사는 140만명¹⁸ 이상의 이주민들이 합법적 사회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사회라면 그들을 활용하여 사회적 인적 자원으로 삼는 것이 현명한 대책일 것이다.

또한, 삶의 터전을 한국에 마련한 그들이 사회나 가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그들이 가진 능력과 노력을 개화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다문화 의식 향상과 그들과의共生에 대한 이해 교육, 기술 습득 지원 정책 등이 이뤄져야 한다. 외국인 이주민이 느끼는 소외감의 원인 중에 하나는 정체성 혼란이다. 그것은 본인들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의식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외국인 이주민 혹은 그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터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평등의식으로 대하고, 정체성을 자의적으로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다문화 사회의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 속에서 소외감이나 격리되어 있다는 차별 의식을 자아낼 수 있는 [다문화 가정 출신] [다문화 가정 어린이] 와 같은 호칭의 양산은 자숙하고, 보이지 않는 편견의 올라미화를 조장하는 용어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이주 근로자 및 결혼 이민자 증가의 배경과 대책

1990년대 한국 사회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위험하고 값싼 임금의 단순 노동층인 소위 3D 업종의 인력난의 대안으로 개발도상국의 인력 확보에 다양한 방안이 모색된다.

1992년에 한중/한베 수교 체결 후, 언어 소통에 불편이 없는 조선족 동포 이주자 (근로자 포함) 증가¹⁹, 1993년에 [산업 연수생 제도] 가 생겨나자 중국이나 동남아 노동자가 늘어난다. 그러나 국내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복지 대책 문제가 다발하자 노동부는 2002년에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조 개선대책] 을, 2004년에는 외국 노동자의 정규 노동자 고용 허가제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해외 노동력을 받아 들이게 된다.

1993년에 20,000명 정도였던 산업 연수생이 2002년 11에는 145,500명 이상이 되고²⁰, 국적도 중국,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14개국으로 다양해지며 취업 기간도 2004년도에 [고용허가제] 의 시행으로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법무부는 2007년에 한국에 연고를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문취업제도] 와 [불법체재 취학아 구제를 위한 합법체재 허가서 발행] 제도를 시행하고, 같은 해에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센터] 를 설립하여 직업훈련이나 언어 문화 학습을 지원하며 인권 옹호에 나섰고, 여성가족부는 [이주 여성 인권센터] 를 개설하여 학습 지원과 생활, 법적 상담들의 창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교육부에선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지원 사업 준비 작업] 에 착수하고, 문화관광부에서는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 문화 가이드북] 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²¹

그즈음 한국 여성들의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결혼 연령이 상승하자 농어촌 남성들의 미혼 만혼화 현상의 해소 방법으로 조선족 혹은 동남아 지역 여성들과의 국제 결혼을 주선하는 행정 기관이 나타나고, 국제 결혼 중개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난다.

베트남 여성들과의 결혼을 중개하는 업체에 관해서 김현미가 지적하듯이 [이주 사업의 특수한 분야인 결혼 중개사업은 단순히 결혼 브로커만을 의미하지 않는 다층적인 사업이자 과정이다. 이러한 이주 비즈니스에는 중개업자, 변호사, 통역자, 관광업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중간 매개자들이 결합된다.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도 한국 중개업체뿐 아니라 베트남 현지의 중개업자, 호텔, 서류 대행업자, 웨딩업체, 여행사, 관광업체 등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이익집단이 결합된 체제로 작동한다. 결혼 중개 시스템의 중층적인 하청과 연결고리를 통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들은 ‘성혼’ 에 이르게 되고 (후략)]²², 결혼 이주자가 급증하게 되자 과도한 선전 홍보로 한국 사회를 그들의 꿈을 이루게 해 줄 지상 최고의 낙원처럼 인식시키는 업체들이 나타나게 된다.

1990년대 이후에 해외에 노동력 송출 국가의 하나로 외화 획득을 정책으로 삼은 베트남측에서의 결혼 이주 여성은 2000년까지 200명이 채 안되었으나, 2003년 이후 소위 한류문화의 과급, 한국 대중문화 인기와 함께 2008년 3월 31일 현재 22,702명으로 급증하게 되는데,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과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원인이지만, 한국 측에서 보면 한국인 남성들이 다른 아시아 여성들보다 피부색이 상대적으로 하얗고 나이가 어린 베트남 여성²³ 을 결혼 상대자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²⁴

그렇게 베트남 여성들이 결혼 대상으로 인기가 있자 영리 목적의 무책임한 결혼 중개 업체나 무허가 중개업체도 늘어나게 되고, 결혼이나 가족을 이룬다는 인간적 개념을 무시한 비인간적인 상업 행위가 이뤄지기도 한다.

국제결혼의 60%가량이 한국인과 관련된 캄보디아의 정부는 2008년 3월과 2010년 3월에 한국인 남성 1명 대 캄보디아 여성 다수의 맞선 주선이 적발되면서 캄보디아인과 한국인 사이의 결혼을 잠정 중단한다는 통보가 있었고²⁵, 2005년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베트남 관련 한 예를 들면, 2007년 4월 9일에 한국인 8명이 호치민시의 한 가옥에서 베트남 미혼여성 118명을 놓고 신부감을 고르는 현장이 경찰에 적발되었고²⁶, 같은 달 23일에는 호치민의 한 결혼 중개 업체에서 한국인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 66명을 상대로 결혼 대상을 고르는 과정에서, 현지 여성들의 알몸을 조사했다는 문제가 발발하여 현장에 있던 한국인 두 사람 등이 체포되었다. 많은 보도 기사들 중에서도 [경향신문] 의 사설이 당시의 국제 결혼 중개업체상황을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기에 인용한다.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온갖 인권침해적인 문구로 국제결혼 희망자를 모집하는 광고 간판과 전단 등이 도심은 물론 시골 곳곳에 나부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들마저 반인권적인 국제결혼사업을 부추기고 있다. 국제사회가 우리를 ‘추한 한국인 (어글리 코리아)’ 이라고 손가락질해도 할 말이 없다.

물론 중개업소를 통한 국제결혼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국제결혼 중개업소들이 국제 조직 연결망을 통해 여성을 모집, 관리, 통제, 이동시키는 자체가 반인권적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李: 한국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라는 호칭 폐지의 고찰과 외국 이주민 및 이주 어린이의 교육 실태

특히 신부가 맞선 준비부터 결혼 후 출국할 때까지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숙소에 머물러야 하며, 그 비용을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는 것은 전형적인 인신매매 사례다.]²⁷

즉, 국경이 낮아지고 세계적인 인구 이동이 급증하자 국제 결혼 중개업소들도 국제적인 조직망으로 미혼 여성들을 모집하여 관리하며 인신매매의 구조로 통제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결혼이 목적인 것보다 한국에 체류 자격을 얻고, 취업의 기회를 얻으려는 생계형 위장 결혼도 늘어나서 더욱 더 불법 결혼 중개업소가 활개를 치고 있다.²⁸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여성가족부는 2008년 6월에 국제 결혼 중개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체계적인 관리를 의도한 [국제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제 결혼 중개업에 관한 등록과 취소를 강화하는 방안을 설치했다. 또, 여성가족부는 아시아의 주요 결혼 상대국의 결혼 이주 여성 담당 공무원들을 초청한 국제 결혼 협조체계 강화 및 건전화 방안 협의 등을 위한 워크숍을 2009년부터 개최해왔는데, 2012년 5월 20일부터 23일까지의 워크숍에는 베트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네팔의 5개국 공무원이 참석을 했다.²⁹

한편, [조각나는 다문화가정]이란 제목으로 5회에 걸쳐서 연재한 [뉴시스]의 배민욱 기자는, 그의 취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최소한의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한국인 남성이 중개업소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외국인 아내를 사오다시피 하는 관행 역시 다문화가정의 해체를 부른다. 상담소(국제 결혼 문제 관련-필자 주)에 따르면 한국 남성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 상황, 학력, 혼인 경력, 나이, 전혼자녀나 치매 노부모의 존재 등을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도 많았다.

한국에 와서야 한국인 남편의 상황을 알게 된 외국인 아내들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며 이혼절차를 문의해왔다. 외국 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³⁰이나 한국 남성들의 절박한 상황 등을 이용해 책임 없이 중개에 임하는 결혼중개업체의 문제 역시 심각하다. 외국 여성을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켜 건전한 결혼을 방해하는 일부 문제 있는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이 더욱 절실한 이유다.]³¹

즉, 무책임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결혼 중개업소의 문제성이 두드러진다. 게다가 개개인들의 결혼에 돈을 주고 받는 매매형태가 존재하므로 동등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만남부터 가난과 그 가난에서 구해주는 계층이란 구조가 깔려있고, 미숙한 발상의 결혼관, 가정관으로 결혼한 그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나 감내하며 다가서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 더구나 결혼은 새로운 가족과의 만남이고, 자녀 교육도 필요하게 되므로, 가족관 및 가정관이 신뢰와 존중 관계에서 형성이 되어야만 가정 운영이 건전하게 되는 것이다.

4. 외국인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 실태

국제 결혼, 이민자 가정 아동의 절반 이상인 54.6%가 어머니의 모국어를 배우는데, 중국의 한민족이 73.8%, 일본인이 71.7%, 우즈베크가 66%에 대해 어머니가 캄보디아나 몽골, 베트남 출신일 경우엔 어머니의 모국어를 배우지 않는다는 아이들이 50%를 넘고 있고, 보육원이나 유치원 교사들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 부모를 가진 어린아이들의 큰 문제점이 언어 발달이 늦다는 점 (43.2%)이었다.³²

즉, 부모의 모국어 학습에 있어서 본인이 성장해서 언어 사용도가 높은 국가의 언어라면 배우지만 활용도가 낮은 국가의 언어는 배우지 않겠다는 이용 가치 성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외국인 부모의 언어 취득이 아이들 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엿볼 수 있다.

한국의 보육소에서 실시한 다문화권 출신 가정의 아이들의 보육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현정환은 외국인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 보육에 관한 지식이나 이해는 보육자의 자기 효력감 인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 보육문제의 개선책으로는 보육자를 대상으로 이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 정보 제공이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³³

다른 문화권에서 실생활을 해야 하는 이주민들의 필수 요건은 언어 습득과 문화 이해에 있다. 그들의 그런 노력으로 자신들의 생활이 원만히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주민 자녀의 학부모들 및 교사들간의 언어 습득 및 문화 이해에 관한 상호 협력과 정보 제공의 공간을 통해 서로 다가가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주민 부부의 가정내 협력 및 적극적인 부부 참석을 통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조건을 전제로 교육기관이나 센터 등의 시설을 통해 이주민 자녀의 학부형과의 만남과 소통, 대화의 장소가 필요하고, 그러한 시간적 확보에 투입되는 교사들이나 학생들의 노동력도 평가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주민 자녀는 물론 학부모와 학교 측의 거리감에서 오는 보이지않는 벽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 아이들이 많은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1월의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의 제목을 소개해본다.

[다문화 가정 자녀 37%가 왕따... “엄마, 학교엔 제발 오지마”]

이 기사는 특정 가정의 자녀를 다룬 내용이 아니라 몇 가지 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기에 장문이지만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7년 5월에 4만 4258명이던 다문화 가정 자녀가 2011년 1월에 15만 1154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들에 대한 차별과 배척은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어가 서툰데다 상당수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데, 주로 외국인 부모를 의식하여 발음이 이상하다거나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식의 차별적 용어가 많다. 게다가 교사들에 의한 차별도 심각하다.

- 1) 어머니가 필리핀 출신인 서울 모 초등학교 5학년 김모군은 3학년때까지 반에서 1등을 하던 우수학생이었으나 3학년 때, 담임의 어머니 면담 요청을 하자 피부색이 검은 엄마가 학교에 오면 놀릴 것 같아서 엄마에게 제발 학교에는 오지말아 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아이 엄마로서 학교 면담을 위해 갔고, 엄마를 본 학생들을 김군을 “깜둥이 자식”이라 놀려서 성적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성격도 내성적으로 바뀌었다.
- 2)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인 초등학생 김모 (13)군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집단 괴롭힘에 시달렸다. 생김새가 다르고 한글을 늦게 배워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고학년 학생들이 김군의 가방과 책을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다. 점심시간에는 “베트남에서는 손으로 음식을 먹지 않느냐”며 수저를 빼앗기도 했고, 신발까지 빼앗아 양말만 신고 집에 돌아올 때도 있었다.
- 3) 어머니가 몽골 출신인 초등학교 5학년 A군은 작년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한국 사람은 양보를 잘하는데 몽골 사람은 싸움을 잘한다”는 차별적인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고, 교실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하자 A군을 비롯한 몽골 출신 아버지나 어머니를 둔 아이들을 먼저 의심하기도 하여 가슴에 상처를 입었다.
- 4) 교과부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 교사가 부모 중 한 명이 일본인인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일본에서도 다 그렇게 (급식비 등) 공짜로 해주니? 그러면 일본으로 가지 여기에 왜 왔어?”라고 말하는 일도 있었다.]³⁴

이상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동남아 출신의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에 대해 한국 사회는 여전히 차별적임을 알 수 있다.

같은 반이나 학교 학생들의 차별주의 의식에는 교사들의 다문화 공생주의 의식이나 인권 의식이 저조함을 엿볼 수 있고, 무엇보다 교사들의 다문화 교육을 통한 수업 속의 다문화 이해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조속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한국의 치열한 수험 위주의 교육 과정 속에 국제 이해나 다문화 교육의 실시를 제도화 시키는 것은 물론, 교사나 학생들, 혹은 주민들이 외국인 이주민의 입장에 서서 생활을 생각해 보고 그 속의 모순점을 스스로 찾아내어서 해결하도록 만드는 실천적 상호 이해의

李: 한국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라는 호칭 폐지의 고찰과 외국 이주민 및 이주 어린이의 교육 실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가 인권위원회가 출판한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에는 학교의 실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역설하고 있다.

[아직도 학교는 다른 곳에 비해 획일화된 기준과 경쟁을 통한 삶의 방식을 강요하며, 집단주의적 획일성이 강조되는 곳이다 (중략) 이러한 학교의 반 인권적 문화는 학교 내에서 다양한 차별이나 편견을 만들어낸다 (중략)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 ‘모든 개인과 사회구성원은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제26조에서는 교육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교육의 목적은 바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교육의 기본적인 과정이다.]³⁵

2006년에 처음 마련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에서는 국제 결혼 가정에 대한 민·관의 체계적인 교육지원은 전무 상태였고, 불법 체류자의 자녀는 그 어떤 교육적 혜택도 받지 못했음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그 뒤, 2008년에는 다문화가정 어린이 교육을 위한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그 보호자에게는 다양한 언어로 학교 생활 가이드 북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2009년에는 초등학교원 양성 대학교에 다문화 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2010년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에는 2006년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지원은 물론, 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문성 재고와 다문화가정 학부모 지원, 다문화 가정의 유아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동반·중도입국 자녀교육지원, 다문화교육 기반 및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다.³⁶

그러나 아직도 입시 위주의 경쟁적 학습 구조 속에 영어권 (최근 중국도 증가) 선호, 1등 및 물질지상주의 의식과 인종 차별의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국 사회에서 수험 우선의 학교 생활에 1회 연수의 다문화 교육이 미치는 그 효과는 현실적으로 기대를 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사회 전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수험 전쟁으로 아이들을 몰고가서 엘리트 인재를 양성하려는 의도가 되려 메마른 사회를 형성해 온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전인적 인도주의 사회 실현으로 타문화를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면 분명 삶의 행복치수는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다.

학교 교육의 붕괴, 10대들의 황포로 보는 무너진 교권, 의사 소통을 거부하는 10대들, 조직화 되는 10대들의 범죄 등 청소년 관련 뉴스가 급증하는 요즈음, 정부는 엘리트 경쟁주의 사회에서 잃어 온 전인 교육, 인도적인 도덕성을 심어주는 인간 신뢰 관계를 위한 교육도 범 사회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교육이란 평생을 사회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영유하기 위한 수단이지 표면적 성적만으로 경쟁에 이겼기에 모든 삶 전체가 평가받는 편견주의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다양한 개성과 인성이 모여서 사회 각 분야를 구성하여 하나의 국가가 기능하고, 각자의 개성이 인정되어 건전한 역할 분담으로 사회 전체가 기능하기에 낙오자에게 더 따스한 손을 내밀 수 있는 배려하는 인도적인 사회가 다문화 사회 형성뿐 아니라 국가 미래를 움직이게 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핀란드의 교육은 비록 인구가 한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더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아이들에게 낙오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국가 전체적 교육 정책이 행해지고, 사회적 교육적 배려와 각 층간의 대화가 철저하게 이뤄지는 교육적 방법이 도입된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도 과거의 역사로 인해 철저한 경쟁 사회 일류 지상주의 사회로 부추켜져 왔으나 이제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로서 복지 인권 환경을 추구하고 평등하고 공생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선진 문화국이 될 수 있다.

각자가 분수에 맞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자신과 사회를 위해 성실히 살고, 정부나 기관은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다문화 교육 정책과 평등한 인권 교육에 힘을 쏟도록 노력을 기울이고³⁷, 차별과 편견을 자아내는 고압적 자세가 없도록 학교 교육은 물론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을 고양하며 외국 이민자 및 그 자녀들이 차별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문화 교육용 연수 기회도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어야 한다.

맺음말; 한국의 기로— 다문화 사회 형성을 위한 다양한 대안 마련을

최근의 경제 발전 과정 속에서 생겨난 남녀 경제 활동과 저출산 현상 등에서 파생된 외국인 근로자의 이주와 동남아를 비롯한 개발 도상국 여성들과의 국제 결혼³⁸, 조선족 동포의 이주와 새터민의 증가 등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2007년 7월부터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을 제정하여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인권 옹호, 사회 통합을 통한 한국 사회를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열린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게 취지였고, 외국인 이주자가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정보 제공, 결혼 이주민 및 그 자녀에 대한 보육과 교육 지원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재한 외국 이주민이 140만명을 넘어선 다문화 사회가 되었으나 문화 및 언어³⁹, 생활 환경이 다른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들이 생각했던 기대치보다 열악하고 사회적 편견과 생활 습성 등의 차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환경 및 복지, 인권 문제는 물론, 이주민 여성들의 높은 이혼율⁴⁰ 및 별거, 이주 결혼 상대에 대한 폭력과 모욕, 한국어 및 한국 문화 학습이 익숙치 않은 부모를 가진 아이들의 교육 문제, 편견 문제, 정체성의 갈등 등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지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런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우선, [다문화 가정 출신] [다문화 가정 어린이] 라는 차별 혹은 편견을 유발시키는 호칭 문제, 즉, 그들을 소외시키는 소수 집단으로 불려지는 한국인의 배려 의식이 없는 고압적 호칭이 암암리에 새로운 한국 사회의 차별 구조를 자아내고 있기에 폐지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 전쟁 이후 주둔하게 된 주한미군과의 사이에서 가정을 만든 사람들 혹은 그들의 아이들, 또는 중국인 (화교)과의 가정 및 그들의 아이들, 베트남 전쟁 직후의 난민 (Boat people)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가정 및 그 가정 출신 어린이, 1980년대의 통일교의 집단 결혼식으로 인해 받아 들여진 일본 여성들과의 국제 결혼 가정 혹은 그 가정 출신 어린이들, 서양인들이나 선진국 출신자들과 결혼하거나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 어린이] 라고 칭한 적이 없다.

다른 문화권에서 이주해 온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가정 및 그 가정의 어린이를 받아들이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이 용어에는 개발도상국에서 온 근로자 혹은 결혼 이주자들⁴¹ (조선족 동포도 포함), 최근엔 탈북해서 새터민이 된 사람들이 만든 가정 및 그 가정 출신 어린이를 칭하고 있고, 이 용어에는 민족주의가 강한 단일 민족으로 살아온 자국민과는 분리 구별이 내재된 차별성의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2년 4월 27일의 연합뉴스에는 27일 경기도 고양의 일산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중국 출신 다문화 가정 주부 류대하씨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문화 가정의 차별을 없애게 해 달라고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며 큰 절을 하는 사진이 보도되었다. 병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차별받는 [다문화 가정] 이란 표현은 반드시 [우리] 라는 한국인 특유의 공동체 의식 혹은 단일 민족 의식과 일치하는 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삶을 영유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사회의 동력이 되어 역할 분담을 하면서 한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경제 불황에 기인하는 실업난과 사회 양극화에 따른 불만 속에 조선족 동포에 의해 수원에서 여성이살해 되는 사건이 불거지자 외국인 배척과 다문화 정책 반대가 강해지고 있다.

[한겨레] 에 게재된 [다문화사회 적응 못하는 한국인] 의 내용을 보면 다문화 정책 반대 카페 소개글에 ‘다문화는 후진국의 값싼 인력과 우리 서민을 저임금 경쟁시키려는 자본가들의 음모다. 이는 가난한 서민에겐 재앙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서민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한다는 우려지만, “건설업·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일자리를 잠식하는 측면이 있지만, 전체 경제규모나 수준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내국인들이 꺼려하는) 일자리를 채워주는 부분이 크다” 며 “직업을 잃은 일부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건 당연하겠지만, 전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확대해석을 사회가 막아야 한다” 는 설동훈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⁴²

또한, 2012년 4월의 총선에서 필리핀 출신 결혼 이주여성 이자스민 (35)이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자, 이에 대한 반감이 인터넷 등을 통해 생기는 현상도 비슷한 맥락인데, “정부가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여성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겪는 인권침해·차별을 본질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보여주기 식으로 일부에게만 시혜를 베풀거나 지원을 몰아주는 정책 위주로 떠다 보니, 서민들은 그 집단 전체가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는 정병호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⁴³

李: 한국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라는 호칭 폐지의 고찰과 외국 이주민 및 이주 어린이의 교육 실태

실업과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불만 등에서 비롯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감·무시·차별은 외국인 범죄의 원인이 돼 사회 갈등을 일으킨다⁴⁴⁾. 무엇보다 급변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세계화 속에서 한국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만혼, 미혼⁴⁵⁾, 저출산화를 해소하는 국제 결혼의 증가는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다. 그렇기에 법적 구성원이 된 사람들 및 그 자녀들은 소중한 인력이자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대우받는 한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사회적 보호를 해야 할 것이고,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 어린이] 라는 차별이나 편견을 자아낼 수 있는 용어나 애칭 등은 폐지시켜야 한다.

한편으로는 한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하기에, 그들에 대한 특별 지원 및 역차별을 자아내는 다양한 공개 이벤트나 특수 교육 및 특별 대우로 자국민의 반감을 불러 일으키고, 이주민에 대한 제도포비아 감정을 조장하게 만드는 기업체나 지자체, 교육 기관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 기획 및 의식 등은 자숙하거나 혹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동등하게 대하는 유익한 사회적 기획을 만들어 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며 차별을 불식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천호성 교수 인터뷰 (2009)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는 현재의 다문화 교육의 상황에 (1) 정부나 지자체 혹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만을 위한 이벤트성 행사는 오히려 ‘다문화가정 자녀’ 라는 낙인과 함께 아이들을 ‘그들’ 과 ‘우리들’ 로 구분짓게 되므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과, (2) 학교의 교사들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좋으나 특별한 관심은 오히려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하여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과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⁴⁶⁾

상기 내용은 필자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인데, 배려도 신중히 하지 않으면 되려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과, 값싼 동정이 아닌 평등 의식의 함양이 중요함을 역설해 둔다.

물론 다문화권 출신의 결혼 이주자나 그의 아이들의 환경으로 보서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사회 습관, 풍습 등이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자라서 사는 사람들과는 동일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교육적 지원 협력은 필요하다. 그렇기에 정부 부처나 교육기관 등에서 그들을 의식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이주민 뿐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일정 조건을 갖추면 수강할 수 있도록 평등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기관의 교육 (교생) 실습생이나 자원한 문화도우미 등을 활용하여 원활한 다문화 교육의 현장, 다문화 수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결코 그들이 지닌 또 다른 문화에 대해서 무시를 하거나 한국 문화에 동화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에 상대 문화의 존중 및 다른 문화를 배우는 국제 이해의 장소로 활용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도 효율적일 것이다. 민족성이 강한 교육 속에 내재된 동화 (assimilation) 교육의 구조가 아닌異문화 이해 교육을 통하여 이주민의 출신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하고, 동시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 언어와 풍습 등도 이해하고 배울 기회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상호 이해와 서로의 노력없이 다문화 사회의 안정이란 불가능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일제 강점기의 역사 문제로 인해 한국 사회는 강한 민족주의 역사 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한국 전쟁 후의 폐허를 민족주의 정책으로 이겨내고 발전해 왔기에 그 과정을 무시한 채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는 없다. 또한, 매년 40만명의 성인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통하여 조국과 민족에 대한 충성으로 복무를 하고 있고, 반면에 반세기 이상의 이념 갈등과 대치 국가로 분단된 민족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한국 이해가 된다. 그런 상호 이해의 기회가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함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 결혼 이주자나 해외에서 이주한 근로자의 출신지는 누구나가 갖고 있는 고향이란 개념 외에, 출신지 (국)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민간 외교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신들의 문화를 가치판단 기준을 넘어서 유일 최고의 문화로 생각하고 상대를 무시하는 [과격하] 자민족 우월주의 (ethnocentrism) 경향⁴⁷⁾ 은 세계화 시대의 고립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한국의

특수성 속에서 [다문화 주의 사회] 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의 의식 개선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이 활발히 이뤄져야 하고, 차별을 과생시키는 용어 양산 및 구조 불식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시대적 전환기에 놓인 한국의 고뇌와 갈등이 양식이 되어 근대 이후 한국의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각지에서 차별과 설움 속에 버겁게 살아야 했던 그런 구조가 한국 땅에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가; 이 논문은 지난 2012년 6월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3회 세계 한민족 포럼에서 필자가 [한국의 미래를 위한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 어린이] 란 차별 용어 폐지 고찰] 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폭 가필하여 수정한 것임.

- 1) 서울『뉴시스』 인터넷판 기사. 2012년 8월 9일.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809120310596>
- 2) 상동.
- 3) 『주간경향』 인터넷판 기사. 2012년 6월 5일자 인터넷판 기사.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605192413186>
- 4) 경기도의회 예산 정책실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 자녀 10명 중 4명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고등학교는 69%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어서 사회적 대책이 시급하다. 『한겨레』 뉴스 인터넷판. 2012년 8월 15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47325.html>
- 5) 『주간경향』 인터넷판 기사. 2012년 6월 5일자 인터넷판 기사.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605192413186>
- 6) 당시의 과전 간호사가 한 일은 대부분이 현직인이 하지 않는 험한 일을 하였고, 그 중에서 시체를 씻는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 7) 다음 문헌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李修京 「韓國の教育事情」 『季論21 教育と社会・人間・学校』 2009年冬号, 本の泉社, 2009, 144 ~ 155頁参照。
- 8) 사회 지도 인사층, 특히 교사/교수/법조계/정치관료 등의 부정, 부패에 기인한 존지, 뇌물, 성상납등과 같은 추문은 지난 2012년 5월 24일에 미 국무부가 지적한 [인권보고서] 내용이 아니더라도 비밀비재하다. 물론, 미국의 [인권보고서] 도 인권국가를 지향하고 지구촌의 경찰 국가라는 미명하에 미국적 잣대에서 결정 짓는 의견의 하나이지만, 한국 사회의 현대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있어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다.
- 9) 일본의 3K 개념과 유사하다.
- 10) 한때 동남아계 여성들과 한국인 사이의 자녀를 Korean+Asian 의 약칭 Korasian 이라 불렀으나 사회적 차별로 낙인 현상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여론하에 용어 사용을 자숙했다. 일본에서도 미군과 아시아인의 약어인 Amerasian 을 사용한 적이 있다.
- 11) 李月順 「韓國の学校における《多文化家庭》の子ども教育と課題」 『京都精華大学紀要』 第36号, 2010年, 57 ~ 58頁参照。
- 12) 金賢美 「韓國における多文化主義と文化的市民権: 結婚移住女性を中心に」 日本学術会議編 『學術の方向』 2011年1月号, 平田由紀江訳, 75頁参照。
- 13) 朴賢淑・坪田光平 「國際結婚家庭における家族支援の意義と課題 韓國の訪問教育を事例にして」 『東北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研究年報』 第60集第1号, 2011, 481頁参照。
- 14) 캐나다 정치철학자인 Charles Margrave Taylor 는 소수와 집단의 권리 및 개인의 기본적인권 존중을 통하여 사회 전체 이익인 행복을 추구하자는 이념으로 다문화주의를 제창. 캐나다는 18세기 이후의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쟁탈이 있은 뒤, 캐나다 독립 후의 케벡주를 비롯한 프랑스어권 지역에 마이널리티 차별의식이 표출되자 정부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하는 상호 존중형의 [2언어 2문화주의] 를 채용. 1971년엔 식민지로 인해 남겨진 이주민, 이주 근로자 등을 수용하기 위한 다문화주의 정책에 힘을 쏟는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으로 인해 2003년도 캐나다 통계국 실시의 자국에 대한 애착(애국심) 조사에서 전 국민의 85%가 애국심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 15) Leg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2009) *The White Paper on Crime*. 檀山昇 「法務総合研究所研究部報告44-7. 韓国」 東京, 法務総合研究所, 221쪽에서 재인용. <http://www.moj.go.jp/content/000084726.pdf>
檀山는 한국에 관련된 형사법 및 범죄 현황 등을 상세히 논하고 있다. 단, 한국 사회 소개에서는 한국 민족이 [漢民族] 이라는 오인이 되어 있음을 지적해 둔다. 상동. 219쪽 참조.
- 16) 2011년 4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의 G20의 성공적 개최와 이어지는 한류열풍 속에서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李: 한국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라는 호칭 폐지의 고찰과 외국 이주민 및 이주 어린이의 교육 실태

대중적이고, 독창적인 이름을 사용하여 대국민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다문화 교육”에 대한 애칭을 공모한다는 목적 하에 [‘다문화 교육’ 애칭 대국민 공모]를 하였다. 다문화 교육을 위한 애칭이란 미명하에 하나의 슬로건 혹은 캠페인화를 통해서 다문화 교육의 프로그램 양산과 적극적인 홍보를 의도하려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이진 또 다른 의미의 문화적 교육적 소의를 내재한 별칭을 만드는 이유가 되기에 진정한 교육 효과를 기대한다면 별칭 혹은 애칭으로 굳이 틀을 만들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일제 강점기 때 식민지 및 전시체제 하에서 효과적인 지배 통치를 노린 일본은 각종 문화적 슬로건을 양산했고, 1930년대의 히틀러 정권 하에서 propaganda의 천재로 불리며 미디어는 물론 각종 문화 소재를 이용하여 정치 선전 홍보 도구로 삼고 나치즘 통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Paul Joseph Goebbels로 인해 절정에 이른 선전 광고 효과는 그 뒤, 지구촌의 각종 전쟁, 분쟁, 내전, 선거, 군부 정책 유지 등에 활용이 되었다. 그러한 영향은 분단 국가이자 경제 개혁을 시행하던 한국 사회에도 잔존하게 되고 오랜 군부 정권하에서 민심을 컨트롤하는 각종 슬로건과 정책 프로그램, 시대를 상징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범람하게 된다. 한국 사회의 저변에는 그런 광고 선전에 길들여진 역사가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광고나 정책을 통한 민심 통제에는 다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다문화화를 받아 들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되려 그런 애칭 혹은 배려없는 호칭으로 사회를 분리시킬 위험성도 있기에 정책적인 용어 만들기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고 사람들이 잘 사는 매력적인 환경 조성을 지향하는 사회라면 가급적 그러한 틀로 사람들을 분리 구별시켜서 평가하거나 지배하려는 경향은 피해야 한다.

- 17)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 전쟁 후, 가난 극복과 경제 개혁이 목표가 되었던 당시, 정부는 多産이 국가 경영의 걸림돌이 되어 [산아제한 정책] [한 아이만 낳아서 잘 키우기 운동] 등으로 강력한 산아제한을 실시했다. 그러나시대와 더불어 국가 동력의 자원이 될 인구가 경제 발전과 더불어 급감하자, 정부는 국가 존속의 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결혼과 출산 권장을 전개하고 있다.
- 18) 『미국 2011 국가별 인권 보고서』 [연합뉴스] 2012년 5월 25일 인터넷판 보도에서는 120만 명으로 명기.
- 19) 2007년엔 [방문 취업제]가 실시되어 중국 조선족 동포의 이주가 급증하게 된다. 지역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2010년의 [지방자치단체 외국계 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2010년 6월 14일 보도자료를 참고로 하면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55.1%가 조선족 동포가 차지한다.
- 20) 한국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사이트 참조.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0275>
- 21) 松岡洋子 「移住者と受け入れ住民の多文化的統合を視座とした共通言語教育」 日本学術振興会H.16年度～19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研究成果報告書(基盤研究B1), 岩手大学国際交流センター, 2008年, 84~85쪽 참조.
- 22) 김현미 「‘사랑’의 이주?; 국제결혼 베트남 여성의 결혼 이주 과정」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다문화 사회를 만든다』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0년, 24~25쪽.
- 23) 2005년의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에 비해서 평균 7세가 높았다. 보건복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 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 정책방안』 2005, 55쪽. 宋賢鍾 「多文化家庭夫婦の離婚過程に関する質的事例研究」 『立教大学コミュニティ福祉学部紀要』 第13号, 梁丁允祝, 2011, 143쪽 재인용.
- 24) 상계서, 김현미 「‘사랑’의 이주?; 국제결혼 베트남 여성의 결혼 이주 과정」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다문화 사회를 만든다』, 13쪽 참조.
- 25) [연합뉴스] 2010년 3월 19일, 인터넷판 참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3/19/0200000000AKR20100319106800069.HTML?did=1179m>
- 26) 『한국일보』 인터넷판. 2007년 4월 27일.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704/h2007042713470421950.htm>
- 27) [사실 반인권적 국제결혼 법적 제재 시급하다] 『경향신문』 인터넷판. 2007년 4월 27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4271801321&code=990101
- 28) 2010년 현재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전국의 국제 결혼 중개업체는 1253업체가 있다.
<http://www.opengirok.or.kr/1597>
- 29) [공감 코리아 정책 정보] 2012년 5월 18일.
http://www2.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828985&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
- 30) 보건복지부의 [국제결혼 이주 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2005년 7월)에 의하면 결혼 이주 여성들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심각한 경제적 불안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1) 『뉴스시스』 인터넷판. 2011년 6월 19일자 배민옥 기자의 연재 기사 참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6&newsid=20110619060307516&p=newsis>
- 32) [연합뉴스] 2012년 5월 8일 일본판 인터넷 기사.
<http://japanese.joins.com/article/769/151769.html>
- 33) 玄正煥 「韓国における多文化家庭の子どもへの保育に関する問題と課題 保育者に焦点をあてて」 『幼年教育研究年報』 第32巻, 広島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附属幼年教育研究施設, 2011, 25 ~ 26頁参照。
- 34) 『조선일보』 인터넷판. 2012년 1월 10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10/2012011000131.html
- 35)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서울,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2009년, 31쪽.
- 36) 成權英 「『多文化社会化』と韓国の音楽教育」 東京学芸大学大学院修士号請求論文, 2011, 20쪽 참조.
- 37) 桜井恵子 「韓国における多文化家庭の子供の教育」 江原裕美編 『国際移動と教育 東アジアと欧米諸国の国際移民をめぐる現状と課題』 明石書店, 2011, 251頁参照。
- 38) [Asian women moved as brides of US servicemen from 1940s-first from Japan, then Korea and then Vietnam... By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marriage migration to Korea was increasing, and brides for India men were being recruited in Bangladesh.] Stephen Castles, Mark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4th Edi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Palgrave Macmillan Limited, 2009, p. 134.
- 39) 노동부 협력으로 16 단체의 실시 단체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JCMK=외국인 이주 노동자 대책협의회] 의 사무국에 의하면, 이주 근로자들의 고용허가제가 3년 연수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3년의 체제로는 한국어 능력을 구사하기가 쉽지 않고, 4-5년 정도가 되어야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전계서, 松岡洋子 「移住者と受け入れ住民の多文化的統合を視座とした共通言語教育」 岩手大学国際交流センター, 2008년, 91頁参照。
- 40) [중부 매일 신문] 의 2012년 5월 14일 보도에 의하면 청주 가정법률상담소에 지난해 이주 여성들의 이혼 상담이 전체의 74%에 해당되었고, 전국적으로는 49.7%가 경제적 빈곤과 차별, 폭력 등으로 별거 증임을 밝혔다.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8476>
- 41) 2009년도 행정 안전부의 조사 보고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불법 체류자 포함)은 1,106,884명이고, 체류 외국인 중 결혼 이민자는 125,673명이며,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 여성이 87.9%에, 그들의 90% 이상이 아시아인이다. 또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주요 출신국은 중국(조선족 포함)이 54.8%, 동남아 32.1%, 일본 4%, 몽골 1.8%, 중앙아시아가 1.5% 순이다. 김우현 [다문화 가정의 결혼초기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한국인 남편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년, 5쪽 참조.
- 42) 『한겨레』 2012년 4월 15일자 인터넷판 참조.
http://media.daum.net/society/?newsId=20120415205004865&t__nil_news=uptxt&nil_id=3
- 43) 상동.
- 44) 상동.
- 45) 『주간경향』 에 의하면 지난 5년 사이 독신자가 100만명이 늘었고, 고령화와 여성 가구주의 증가로 1인 가구가 늘어났다. 2012년 5월 9일 인터넷 기사 참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509155741775&cateid=1067>
- 46) 2011년도 제 1차 전북 다문화 포럼 참조.
http://www.jthink.kr/korean/2011/sboard/data/20110516185024_sa4_27828.pdf
- 47) 石井敏・岡部朗一・久米昭元 『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新国際人への条件 Intercultural Communication, 2nd Edition』 東京, 有斐閣, 2001, 119頁参照。